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2/10/5 통권 1591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CEO는 '인(人)프라' 구축에 힘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점검 결과 및 유의사항

###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와 예정고지납부  
서

###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패키지 상품을 이용한 해외여행은 업무상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 '18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증가
- 타인 명의로 재산은닉한 악의적 채납자 추적조사 실시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점검 결과 및 유의사항

###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정부와 수입대행 계약 체결 후 군수품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됨 (p.12)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부가가치세법상의 적법 사업장으로 교부받은 부가세 매입세액만 공제됨〉

개념구분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지 = 사업자 등록지(부가가치세법 제6조)
사업장의 정의	사업장은 사업거래의 전부,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임(사업장 없으면 사업자의 주소 거소임)
사업자 단위 과세	각 사업장 대신해 사업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함
일반 제조업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포장, 용기충전, 저유소는 제외 안됨)
일반적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법인: 등기부상 소재지 등)
도 · 소매업 등	사업장 생산 ·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는 시설(직매장)을 사업장으로 함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 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함
사업자의 신청	일반적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으로 추가 사업장 등록 가능
사업자 등록 가능	일반적 사무실, 공장, 유통판매장소, 오피스텔, 공유오피스, 근린생활시설, 주택(아파트도 주민 반발 없으면 가능)
사업장 아닌 경우	재화 보관하는 하치장 신고장소, 행사 개최되는 임시 사업장(기존 사업장에 포함)
재화 수집자	관세법상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임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영·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전조세정보  
02-829-7575

#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91호 / 주간 40호

2022. 10. 5. (수)

· 발 행 인 : 이 윤 선  
· 제 작 : (주) 안세회계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 목 차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 eAnSe.com의 차별화 특징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문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정전략	부가가치세법상의 적법 사업장으로 교부받은 부가세 매입세액만 공제됨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와 예정고지납부서	2
C E O 에 세 이	CEO는 '인(人)프라' 구축에 힘쓴다	3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회계처리 문의 - 기계장치 수리에 따른 비용에 대한 자본적지출 가능여부 - 외국인 사업소득 신고 문의 - 주류카드	5 6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패키지 상품을 이용한 해외여행은 업무상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7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기본 과세체계 - 가업승계 사후관리 요건	9 10
직 장 인 Survival	타인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12가지 ②	11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사업자가 정부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대행수입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법령부가-8034, 2021.12.30) -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재난지역에 주소를 두고 해당지역의 입시학원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법규소득-3310, 2022.02.25)	12 13
세 정 뉴 스 와 해 설	국세청, 중소기업 간편조사 확대... R&D공제 제출서류 간소화	14
마케팅 Tax consulting	정부와 수입대행 계약 체결 후 군수품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됨	12
세 무 정 보	-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 '18년이하 최고 수준으로 증가 - 타인 명의로 재산은닉한 악의적 체납자 추적조사 실시	15 30
회 계 정 보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점검 결과 및 유의사항	42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를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8

#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와 예정고지납부서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자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 양수 컨설팅  
(829-7575)

개념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확정신고납부 (부가세법 제4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2번(상반기 1~6, 하반기 7~12)</li> <li>매출매입 거래 실액대로 확정신고 자진납부</li> </ul>	좌동
예정신고납부 (부가세법 제48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반기(6개월)의 3개월(1~3, 7~9)마다 직접 6개월과세기간 납부, 결정세액의 50%를 세무서 고지대로 납부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까지는 예정신고도 실액대로 자진신고납부</li> <li>• 2021년부터는 세무서 예정 고지대로 납부가 원칙(법인의 본사, 지점이 별도 신고시 각 지점단위로 직전 6개월의 공급가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li> </ul>
예정고지납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사업자는 모두 전 분기의 50% 예정고지 납부 원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사업자 중 직전기 매출 1.5억원 미만 소사업자는 전 분기의 50% 예정고지납부가 원칙으로 됨(2021년부터)</li> <li>주의점 : 소법인이 예정고지와 관계없이 자진신고납부로 신고하면, 신고서 납부서와 고지납부서의 이중납부고지서로 한 건 체납으로 인식됨</li> </ul>
휴업, 사업부진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사업실적악화나 예정납부세액의 3분의 1 미달시 실제대로 자진신고납부 가능	좌동

# CEO는 '인(人)프라' 구축에 힘쓴다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재, 많이 컸어. 누가 키웠는데 은공도 모르고, 참!"

흔히 연예계나 조폭들 사이에서 오가는 볼멘 소리다. 사실 인간사 어디서나 한번쯤 배알이 뒤 틀려 내뱉음직한 통명스런 불만의 표현일 수 있다. 하지만 누가 누구를 키운다는 말인가. 기업의 인프라(Infrastructure)중 정보인프라도 설비인프라도 유통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인프라, 즉 '인(人)프라'는 정말 중요하다. 더구나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따른 가치 창출이 모든 것에 우선 하는 지식기반사회가 아닌가. 그런데 그 인재를 키운다고? 아니다. 그게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인재가 성장하는데 기여한다고 하는 게 옳다. 기회를 제공하고 도와주는 일이라는 뜻이다. 막 태어난 갓난애도 스스로의 의지가 우선해야 한다. 그래야 젖을 물려도 젖을 빨아대며 생육의 순환 속에서 자라간다. 그리고 보고 듣고 냄새를 맡으면서 반응하며 깨달아간다. 그것을 돕는 게 엄마의 역할이다. 그래서 키운다기보다 자라는 것을 돕고 생존의지에 기여한다는 말이 훨씬 적절하다.

## 인재는 육성되는 게 아니다

물론 키운다는 상식적인 뜻을 완전히 묵살할 의도는 아니다. 다만 기업경영에 있어 CEO가 인재를 키운다는 망상이나 착각에 빠지는 오만이 없기를 기대해서 하는 말이다. 교육(?)으로 유난스런 한국의 대표적 기업 S그룹의 경우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웃기는 일을 행해 왔다. 신입사원들의 자율적 의지와 능력개발을 통한 기업의 번영을 꾀하는 게 아니었다. 자랑삼아 몇 개월씩 연수원에 때려 넣은 후 아예 'S그룹 맨을 만든다'는 망상을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자행해 왔다. 혹시 산업사회의 노예는 양산했는지 모르지만 인재는 대저 천만의 말쑥이다. 다른 대기업도 그런 억지 교육·육성 프로그램을 흉내내는 풍토도 한심하다. 또 비용 때문에 흉내내지 못하는 중소기업

업의 안타까운 착각도 일깨워주고 싶다. 이제 와서 ‘핵심인재’를 헌팅한다고 부산을 떨며 세계 각 국에서 수입하느라 혈안이다. 그만큼 인재 성장을 돕는 철학이 베풀어져 있었고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이다. 휴대폰도 수출효자상품이라고 요란하지만 뒤에서는 원천기술 소유자인 퀄컴(Qualcomm)사가 앉아서 막대한 로열티 수입을 소리도 없이 거둬들이고 있다. 1995년 퀄컴사의 제이콥스 회장이 자금난을 덜기 위해 한국에 일부 투자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일화는 유명하다. 기술 판독능력을 가진 기초적 인재도 없었던 것이다. 물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그 후 7년 동안 국내 기업들이 낸 로열티만 자그마치 9억3천만 달러에 달한다.

## 체험과 토론의 기회를 주어야

지난 해 일본열도는 한 무명의 회사원에게 열광했다. 그는 하고 많은 박사도 아닌 교토 시마즈 제작소의 말단 연구원이었다. 2002년 노벨화학상 공동 수상자 다나카 고이치. 44세의 젊은 그는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특별나다. 일본이 지난 10년을 잃었다고 한다. 그러나 묵묵히 인재에게 연구할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고 그런 회사가 있는 나라다. 인재는 스스로 불현듯 성장한다는 웅변적 사례다. CEO가 술 마시고 골프 치고 변칙 경영을 일삼지 않고 독서하고 깊이 사색하는데 시간을 바치는 게 어떤가. 또 공부시킨다고 주입식 강의는 이제 제발 벗어났으면 싶다. 면책특권을 부여한 후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토론의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떤가. 잭 웰치가 GE의 연수원 크로톤빌에서 직원들에게 무한한 토론의 장을 제공한 것을 상기하자.

또 해외출장을 명할 때 며칠 간 놀러 다닐 여유를 제공하자. 한 번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게 값지다. 비즈니스 실험을 용납했으면 싶다. 연구소에서 실패를 거듭하며 실험을 하듯 비즈니스 실수를 용납하고 격려하라. 그것이 형평성에도 맞다. 그러면 인재는 스스로 자란다.

## 회계처리 문의

**Q** 당사는 A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완성차 업체에 납품을 하는데 생산 캐파가 부족하여 A가 해야할 조립가공을 당사 외주업체의 지원을 받아 작업을 진행(4월~5월)하였고 대금은 당사가 외주업체에 먼저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에 5월 마감시 A에게 외주업체 지원 인건비를 공제하고자 하는데 질문인 즉,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외주업체 지출되었던 추가 인건비 품의를 증빙으로 A사에 대금 지급시 공제처리만 하면 될런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A사를 매입자로 하여 발행해 처리해야 할런지 여부입니다.

**A** 외주업체의 조립가공용역에 대한 최종 대금 부담자가 A이므로, A는 조립가공용역을 제공한 외주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고 해당 조립가공용역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해 귀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기계장치 수리에 따른 비용에 대한 자본적지출 가능여부

**Q** 기존에 20년정도 사용한 기계장치에 대해 수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계장치 수리는

- 최초 성능이 100 이었으나 오랜 사용으로 인해 성능이 70으로 떨어져있으며 수리를 통해 100의 성능이 나올 수 있게 하는 작업

- 기계의 오랜 사용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이에 대해 전체적인 수리를 진행해 원활한 사용이 되도록 하는 작업

상기 2가지의 형태가 주를 이룰 예정입니다.

해당 수리를 통해 기계장치의 사용가능기한은 현재의 상태일때보다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럴 경우 해당 수리비를

자본적지출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법인세법상 자본적지출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의미하는데, 자산이 원래 성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도 자산의 원래성능회복을 위한 수선비라면 수익적지출로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외국인 사업소득 신고 문의

**Q** 국내거주중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프리랜서가 있어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외국인 분이 국내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미국에 체류하게 되었을 경우(베트남 국적 미국 신분) 비용 지급시 소득신고 유형과 세금신고 등 방법 문의드립니다.

**A** 국내세법은 외국인/내국인이라는 국적이 아닌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으로 국내과세 및 원천징수여부가 결정되는데,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해당 외국인의 거주자 여부가 불명확한데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과세가 되므로 국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주류카드

**Q** 주류회사에서 주류를 구매하고 주류카드로 결제를 하고있는데요.  
새롭게 거래를 한 업체가 소규모 양조장이어서 주류 단말기를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 주류카드로 대금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구매금액에 맞추어 발행 받고 있는데 이런경우 계좌이체로 대금 지급을 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A** 주류 구매후 세금계산서 수취하고 계좌이체로 대금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나, 주류카드 가맹점 등으로 가입하지 않고 주류카드 발행비율이 낮은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속 거래할 예정이라면 거래 상대방에게도 주류카드 가맹점에 가입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 패키지 상품을 이용한 해외여행은 업무상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상담실 백종훈 차장

법인세법상 손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의미하는데, 법인의 사업(업무)과 관련이 있고, 일반적이고 합리적으로 용인되는 금액의 한도내이며,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지출 또는 비용)라는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법인이 지급하는 임원이나 직원의 해외여행 관련 여비도 무조건적으로 손금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해외여행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으면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비용을 계산하고 있는 등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금액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 업무관련성의 판정

임직원의 해외여행에 따른 경비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여행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인지의 판단은 그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판정하게 된다.

하지만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여행이나 여행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에 응모하여 행하는 여행, 동업자단체·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가 주최하여 행하는 단체여행으로서 주로 관광목적이라고 인정되는 여행은 원칙적으로 업무수행상 필요한 여행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로 업무와 관련된 해외여행이라도 여행사 등의 패키지 상품 등을 이용해 다녀온다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 서이46012 - 10582, 2001. 11. 20

법인이 임직원의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알선업자 등이 제공하는 정형화된 상품(패키지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의 수취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법인46012 - 2268, 2000. 11. 16 및 부가46015 - 1296, 2000. 6. 2)을 참고하기 바람. 다만, 여행알선업자 등이 제공하는 정형화된 상품(패키지상품)을 이용한 여행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물론 해외여행을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해 다녀왔더라도, 그 여행기간 중의 여행지, 수행업무 등으로 보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이때에도 왕복 교통비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여비 및 업무성과 관련 포상여행은 손금불산입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이 아닌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한 해외출장비나 해외연수비 등의 해외여비는 업무와 관련 있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회사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손금불산입이 원칙이다.

또한 업무성과가 우수한 직원이나 부서에게 포상차원에서 해외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업무와 관련된 여행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비용을 법인의 비용이 아닌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

즉, 특정 해외여행이 업무와 관련 있는지의 여부는 여행을 떠나기 전의 해외여행과 관련된 업무관련성이 아닌 실제 여행지에서의 업무가 수행되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우수자에게 포상한 해외여행경비의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여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 ♣ 서이 - 45, 2005. 01. 06

업무실적 우수 근로자에 대한 포상 성격의 해외여행경비 지원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19 - 19...22(해외여비의 손금산입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보는 것임.

### 해외여행에 따른 지출증빙의 수취

해외여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출증빙의 경우 항공료는 항공권이면 되고, 숙박요금이나 식대 등은 해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이므로 지출증빙특례규정이 적용되므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수취의무가 없지만, 현지에서 받은 영수증 등을 수취하면 된다.

하지만 여행사 등을 통해 해외여행을 진행하는 경우 여행사에서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총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수취하여야 하며, 여행사가 교통비 · 숙박비 등의 소요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나머지 비용은 직접 영수증 등을 수취하여야 한다.

#### ♣ 재소비-34, 2006.1.11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비 · 숙박비 · 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기본 과세체계

시점	내용	
부여시점	과세 이슈 없음	
행사시점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과세	행사이익 = 행사 시 시가 - 매수가액
매도(실현)시점	양도소득 과세	양도차익 = 매도가액 - 행사 시 시가
		대주주 또는 비상장주식 양도 등 일정한 경우에만 과세



###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개요

	특례적용 전	특례적용 후
과세시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 매도 시
행사이익	행사 시 시가 - 매수가액	매도가액 - 매수가액
과세소득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양도소득
적용세율	6~45%	10~30%



## 가업승계 사후관리 요건

구분	현행	개정안
사후관리기간	7년	5년
업종변경범위	중분류(표준산업분류) 내 변경 허용	대분류 내 변경 허용
고용유지의무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80% 이상 또는 총급여액 80% 이상	삭제
	7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100% 이상 또는 총급여액 100% 이상	5년 통산 100% → 90%
자산유지의무	가업용 자산의 20%(5년 내 10%) 이상 처분 제한	20%(5년 내 10%) → 40%



## 각국의 반도체 사업 지원 보조금 및 세제혜택

구분	보조금 및 세제 혜택
미국	520억 달러 연방 투자, 투자 세액 공제
EU	430억 달러 공급, 민간투자
일본	44억2000만 달러, 설립비용 최대 50% 보조금(TSMC 공장 건설에 약 35억달러 지원 예정)
인도	반도체 및 기술 공급망에 300억 달러, 프로젝트 비용 최대 50% 지원
중국	1차 207억 달러 및 2차 304억7000만 달러, 과세 우대
한국	R&D 투자 최대 50% 세액공제, 제조 투자 20% 세액공제, 민간투자 2030년까지 4500억 달러 유치
대만	법인 세액 공제, R&D 세액 공제 15%, 토지, 수자원 및 전력 확보 지원



## 타인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12가지 ②

7. 먼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어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나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 하나를 상대방에게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우선 먼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준 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해야 한다.

8. 푸념하지 마라.

이것은 무엇보다도 당신을 실패자처럼 보이게 만든다.

9. 당신의 주장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마라.

질서 정연하게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당신 말을 듣는 사람들을 이끌어라.

당신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라.

10. 말하기보다 먼저 들어야 하는 이유

다른 사람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상대방과 나를 하나의 끈으로 묶어줄 것이다.

11. 자신을 설득 상대라고 가정한다.

의견 조율을 할 때 설득 당하는 입장에서 자신이 설득할 내용을 들어본다.

스스로 납득할 수 없다면 이미 그 방법은 틀린 것이다.

12. 서두르지 마라.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이루겠다는 성급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면

무리한 전략을 세워 좋지 못한 결과를 거두게 된다.

# 최 신 판 례 예 규

## Marketing Tax consulting

정부와 수입대행 계약 체결 후  
군수품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됨

사업자가 정부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대행수입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법령부가-8034, 2021.12.30

### ■ 질 의

- 사업자 갑은 방위사업청과의 계약에 따라 전비품 확인서가 발급된 군수품을 갑 명의로 수입하여 방위사업청에 공급할 예정임

질의

- 사업자가 전비품 확인서가 발급된 군수품을 수입하여 방위사업청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 회 신

사업자가 정부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전비품 확인서를 발급받고 정부의 군수품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대행수입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69①단서 및 조특령 §66⑦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은 없는 것임

사전법규재산-195, 2022.03.11

### ■ 질 의

- 토지 취득 후에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고 해당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 양도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69①단서 및 조특령 §66⑦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분자와 분모가 모두 음수로 나온 경우,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방법

### ■ 회 신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21, 2019.05.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21, 2019.05.08. >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를 상속받은 후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되고, 그 보상가액이 주거지역 편입 이전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7항에 따른 계산식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는 것입니다.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재난지역에 주소를 두고 해당지역의 입시학원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법규소득-3310, 2022.02.25

### ■ 질 의

- 신청인은 '20년에 대구지역에 주소를 두고 해당지역 소재 입시학원에서 강사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음
  - 종합소득세 신고 업종코드 : 기타자영업-학원강사(940903)
  - 총수입금액('20년 귀속): \*\*,\*\*\*,\*\*\*원
  - 인적용역 사업자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음

질의

- 조특령 2①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인적용역사업자로서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99의11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24, 2022.2.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24, 2022.2.21.

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선포된 재난지역에 주소를 두고 해당지역의 입시학원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보는 것임

서면법규재산-3807, 2022.03.25

### ■ 질 의

- 2017.2월 경기 수원시 소재 A아파트 취득
- 2020.6월 경기 수원시 소재 B아파트 취득
  - B주택 취득 당시 A,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B주택에는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이었으며, 해당 임대차계약서상 전소유자와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은 1년임
- B주택 취득 후 임차인이 당초 임대차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2년 거주 요청

질의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기간은 1년이나 임차인이 2년 거주 요청 시 일시적 2주택의 신규주택

###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국세청, 중소기업 간편조사 확대… R&D공제 제출서류 간소화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3일 중소기업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영세납세자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는 세무조사 간편조사 비중을 늘리는 한편, 간편조사 선택제 실시, 조사기간 단축 등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특별시 구로구금천구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및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고위간부들과 이행만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 본부장, 김기원 KIBA 회장산단 등 산업단 대표를 참석 하에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는 각종 첨단산업분야의 정보기술분야(IT) 기업 등이 입주해 있다.

국세청은 연구개발기업들 지원을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감면과 기업승계 제도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참석 산업단 대표들은 국세청에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축소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벤처투자 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개선 ▲중견기업까지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확대 등을 건의했다.

국세청은 건의사항은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세무행정 에 반영할 예정이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유기간 2년 미만이면 세율 60~70%

국세청은 22일 제7회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탐10을 공개했다. 이는 주택 양도세과 관련해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 등에 문의한 내용 중 가장 질문이 많았던 10개안을 추린 것으로 납세자가 혼동하기 쉬운 사례가 담겼다.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관계없이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팔아야 중과 배제를 적용받는다. 보유 1년 미만일 때 팔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다. 분양권 양도는 2021년 5월 31일까지는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따졌지만, 2021년 6월 1일부터

는 지역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주택매도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매각 주택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될 경우 계약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 계약금을 조정대상지역 선정 전 받고 계약서만이 됐다면, 그 때는 매매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없었다고 보지만, 계약금을 조정대상지역 선정 후 받았으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고 보고 양도세 중과 여부를 따지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있고, 비조정대상 지역에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과 3억원 이하 주택을 각각 한 채씩 가지고 있을 경우 비조정대상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팔 때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주택은 팔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된다.

### "상위 10% 대기업 R&D 투자, 하위 10% 기업의 164배"

국내 상위 10% 대기업의 연구·인력 개발비 규모가 하위 10% 소기업의 164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희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수입금액이 상위 10%인 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로 36조6천763억원(잠정)을 지출했다.

이는 전체 법인세 신고 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39조7천132억원)의 92.4%에 해당한다. 하위 10% 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2천231억원)의 164배다. 수입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물품판매업에서는 총매출금액, 용역제공업은 수령한 금액의 합계액을 가리킨다.

연구·인력 개발 투자는 상위 10% 기업 중에서도 상위 1% 기업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기업이 쓴 연구·인력 개발비는 32조802억원으로 전체 법인이 지출한 연구·인력 개발비의 80.8%를 차지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들은 신성장·원천기술 등을 얻기 위해 연구·인력 개발에 쓴 돈의 일정 부분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이 제고되지 않으면 결국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을 올해보다 28%나 깎은 것은 이런 시대적 필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 '18년이래 최고 수준으로 증가

- 국세청, 2021. 9

- (신고 결과) 금년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총 3,924명, 64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신고인원(794명, 25.4% ↑) 및 신고금액(5조 원, 8.5% ↑)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2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특이사항

- ① (개인 주식계좌 신고 급증) 해외증권사 주식계좌 신고인원은 1,621명, 금액은 15.8조 원으로 전년 대비 644명, 12.9조 원만큼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② (신고계좌 소재지국) 해외금융자산 신고액 64조원 중 미국이 26.8조 원, 일본이 10.8조 원으로 2개국의 비중이 58.8%를 차지하였습니다.
- ③ (신고자산 연령 분포) 예·적금 계좌 신고금액은 50대 이상 비중이 77.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주식계좌 신고금액은 40대, 50대의 비중이 92.7%입니다.
  - 10대 이하 예·적금 신고인원은 7명, 금액은 36억 원이며, 주식계좌 신고인원은 6명, 금액은 17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향후 계획) 올해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뿐만 아니라 미신고금액의 자금출처 검증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관련 세금 추징,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을 엄정 집행할 예정입니다.

- 한편,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니, 신고대상자는 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 바랍니다.

## I 202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 1 결과 개요

- 금년도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인원은 3,924명, 신고금액은 64조 원으로, 지난해 신고인원 3,130명, 신고금액 59조 원 대비 신고인원은 794명(전년대비 25.4%) 크게 증가하였고, 신고금액도 5조 원(전년대비 8.5%)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 금년도 신고금액은 '18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역대 해외 금융계좌 신고금액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 《202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명, 개, 조 원)

구 분	2022년						2021년		
	인원(증가율)		계좌(증가율)		금액(증가율)		인원	계좌	금액
전 체	3,924	(25.4%)	20,909	(4.1%)	64.0	(8.5%)	3,130	20,077	59.0
개인	3,177	(33%)	9,952	(10%)	22.4	(138%)	2,385	9,047	9.4
법인	747	(0.3%)	10,957	(△0.7%)	41.6	(△16%)	745	11,030	49.6

- 개인신고자와 법인신고자 각각 신고결과를 살펴보면,
  - 개인신고자는 3,177명이 22.4조 원을 신고하여, 전년도 신고인원 2,385명, 신고금액 9.4조 원에 비해 신고인원은 792명(전년대비 33%), 신고금액은 13조 원(전년대비 138%) 증가하였습니다.
  - 법인신고자는 747개가 41.6조 원을 신고하여, 전년도 신고법인 745개, 신고금액 49.6조 원 대비 신고법인 수는 거의 변동이 없고, 신고금액은 8조 원(전년대비 △16%)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인신고자 수가 거의 변동없고 법인 신고금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인 신고인원·신고금액의 큰 폭(전년비 각각 33%, 138%)의 증가가 전체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의 비교적 큰 폭으로의 증가(전년대비 각각 25.4%, 8.5%)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 신고자산별 분석

- (전체 신고자) 올해 전체 신고자 3,924명 중에서 예·적금계좌 신고인원은 2,489명, 신고금액은 22.3조 원으로, 전년대비 신고인원 수와 신고금액이 거의 변동 없으나,
  - 주식계좌 신고인원은 1,692명, 신고금액은 35.0조 원으로, 전년도 신고인원 1,046명, 신고금액 29.6조 원에 비하여 신고인원은 646명(전년대비 62%), 신고금액은 5.4조 원(전년대비 18.3%)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전체 신고자의 신고자산별 현황 》

(명, 조 원)

구분		전체 (순인원)	예적금	주 식	파생상품	집합 투자증권	기 타
신고 인원	'22년	3,924	2,489	1,692	81	208	512
	'21년	3,130	2,313	1,046	79	210	460
신고 금액	'22년	64.0	22.3	35.0	1.4	3.5	1.8
	'21년	59.0	22.5	29.6	0.9	3.0	3.0

- (개인) ' 22년 개인신고자 3,177명 중 예·적금계좌 신고인원은 1,801명, 신고금액은 4.3조 원으로, ' 21년 신고인원 1,636명, 신고금액 4.7조 원과 비슷한 수준이나,
  - 주식계좌 신고인원은 1,621명, 신고금액은 15.8조 원으로, ' 21년 신고인원 977명, 신고금액 2.9조 원 대비 신고인원은 644명(전년대비 66%), 신고금액은 12.9조 원(전년대비 445%)만큼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이는 21년 해외주식 시장 호황에 따른 보유주식 평가액 상승,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증가에 따른 주식 취득 등이 주된 요인으로 보입니다.

《 개인의 신고자산별 현황 》

(명, 조 원)

구분		전체 (순인원)	예적금	주 식	파생상품	집합 투자증권	기 타
신고 인원	'22년	3,177	1,801	1,621	53	185	469
	'21년	2,385	1,636	977	48	192	413
신고 금액	'22년	22.4	4.3	15.8	0.2	0.5	1.6
	'21년	9.4	4.7	2.9	0.2	0.5	1.1

- (법인) ' 22년 법인신고자 747개 법인 중 예·적금계좌 신고법인은 688개, 신고금액은 18.0조 원으로, ' 21년 신고법인 수 677개, 신고금액 17.7조 원과 거의 변동이 없으나,
  - 주식계좌 신고법인은 71개, 신고금액은 19.1조 원으로, ' 21년 신고법인 69개, 신고금액 26.7조 원과 비교할 때, 개인과 달리 법인 신고금액은 전년대비 7.6조 원(△29%) 감소하였습니다.

## 《법인의 신고자산별 현황》

(개, 조 원)

구분		전체 (순인원)	예적금	주식	파생상품	집합 투자증권	기타
신고 인원	'22년	747	688	71	28	23	43
	'21년	745	677	69	31	18	47
신고 금액	'22년	41.6	18.0	19.1	1.2	3.1	0.2
	'21년	49.6	17.7	26.7	0.8	2.5	1.9

## 3 신고자산의 국가별 분포 분석

- (신고자산 국가별 규모) 올해 예·적금, 주식 포함 해외금융자산 신고액 64조 원의 보유규모 기준 상위 10개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계좌 소재지국은 총 141개국이나 미국 26.8조 원(41.9%), 일본 10.8조 원(16.9%) 2개국의 비중이 37.6조 원(58.8%)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 예·적금계좌

- (전체) '22년 예·적금계좌 신고액 22.3조 원은 국가별로, 미국(4.2조 원, 18.8%), 싱가포르(2.3조 원, 10.3%), UAE(1.6조 원, 7.2%), 대만(1.5조 원, 6.7%), 중국(1.4조 원, 6.3%) 순으로 분포하였습니다.

## 《'22년 전체 신고자의 예·적금계좌 국가별 분포》

(명, 조 원)

구분	전체	미국	싱가포르	UAE	대만	중국	기타
신고 인원	2,489	1,089	247	85	120	375	-
	100%	43.8%	9.9%	3.4%	4.8%	15.1%	-
신고 금액	22.3	4.2	2.3	1.6	1.5	1.4	11.3
	100%	18.8%	10.3%	7.2%	6.7%	6.3%	50.7%
인당금액	90억 원	39억 원	93억 원	188억 원	125억 원	37억 원	-

- (개인) 개인신고자의 예·적금계좌 보유규모는 국가별로 미국(1.5조 원, 34.9%), 싱가포르(0.8조 원, 18.6%), 홍콩(0.6조 원, 14.0%), 중국(0.3조 원, 7.0%), 캐나다(0.2조 원, 4.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의 예·적금계좌 국가별 분포》

(명, 조 원)

구분	전체	미국	싱가포르	홍콩	중국	캐나다	기타
신고 인원	1,801	910	151	199	218	84	-
	100%	50.5%	8.4%	11.1%	12.1%	4.7%	-
신고 금액	4.3	1.5	0.8	0.6	0.3	0.2	0.9
	100%	34.9%	18.6%	14.0%	7.0%	4.7%	20.8%
인당금액	24억 원	16억 원	53억 원	30억 원	14억 원	24억 원	-

- (법인) 법인신고자의 예·적금계좌 보유규모는 국가별로 미국(2.7조 원, 15.0%), UAE(1.6조 원, 8.9%), 싱가포르(1.5조 원, 8.3%), 대만(1.5조 원, 8.3%), 중국(1.2조 원, 6.7%) 순이었습니다.

《법인의 예·적금계좌 국가별 분포》

(개, 조 원)

구분	전체	미국	UAE	싱가포르	대만	중국	기타
신고 인원	688	179	83	96	115	157	-
	100%	26.0%	12.0%	14.0%	16.7%	22.8%	-
신고 금액	18.0	2.7	1.6	1.5	1.5	1.2	9.5
	100%	15%	8.9%	8.3%	8.3%	6.7%	52.8%
인당금액	262억 원	151억 원	193억 원	156억 원	130억 원	76억 원	-

주식계좌

- (전체) '22년 주식계좌 전체 신고자 1,692명의 계좌는 대부분 미국(1,469명, 86.8%)에 소재하고 있고,
- 주식계좌 신고액 35.0조 원은 미국(20.3조 원, 58.0%), 일본(10.2조 원, 29.1%), 말레이시아(1.5조 원, 4.3%), 영국(0.8조 원, 2.3%), 홍콩(0.7조 원, 2.0%) 순으로 분포하고 있어, 주식계좌 보유액의 대부분이 미국과 일본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년 전체 신고자의 주식계좌 국가별 분포》

(명, 조 원)

구분	전체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영국	홍콩	기타
신고 인원	1,692	1,469	30	*	11	33	-
	100%	86.8%	1.8%	-	0.7%	2.0%	-
신고 금액	35.0	20.3	10.2	1.5	0.8	0.7	1.5
	100%	58.0%	29.1%	4.3%	2.3%	2.0%	4.3%
인당금액	207억 원	138억 원	3,400억 원	-	727억 원	212억 원	-



- (개인) '22년 주식계좌 개인신고자 1,621명의 계좌 대부분이 미국(1,444명, 89.1%)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 주식계좌 규모는 미국(14.3조 원, 90.5%), 일본(0.6조 원, 3.8%), 홍콩(0.4조 원, 2.5%), 덴마크(0.3조 원, 1.9%), 아일랜드(0.04조 원, 0.3%) 순입니다.

#### 《개인의 주식계좌 국가별 분포》

(명, 조 원)

구분	전체	미국*	일본	홍콩	덴마크	아일랜드	기타
신고 인원	1,621 100%	1,444 89.1%	17 1.0%	30 1.9%	* -	18 1.1%	- -
신고 금액	15.8 100%	14.3 90.5%	0.6 3.8%	0.4 2.5%	0.3 1.9%	0.04 0.3%	0.16 1.0%
인당금액	97억 원	99억 원	353억 원	133억 원	-	22억 원	-

\* '21년 미국주식계좌 신고인원 826명, 신고금액 1.7조 원 대비  
신고인원 618명(전년대비 75%), 12.6조 원(전년대비 741%) 증가

- (법인) '22년 주식계좌 법인신고자 71개 법인의 신고금액은 일본(9.6조 원, 50.3%), 미국(5.9조 원, 30.9%)으로서 2개국 비중이 15.5조 원(81.2%)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 주식계좌 보유규모는 일본(9.6조 원, 50.3%), 미국(5.9조 원, 30.9%), 말레이시아(1.5조 원, 7.9%), 영국(0.8조 원, 4.2%), 홍콩(0.3조 원, 1.6%) 순으로 많았습니다.

#### 《법인의 주식계좌 국가별 분포》

(개, 조 원)

구분	전체	일본	미국	말레이시아	영국	홍콩	기타
신고 인원	71 100%	13 18.3%	25 35.2%	* -	* -	* -	- -
신고 금액	19.1 100%	9.6 50.3%	5.9 30.9%	1.5 7.9%	0.8 4.2%	0.3 1.6%	1.0 5.1%
인당금액	2,690억 원	7,384억 원	2,360억 원	-	-	-	-

## 4 신고자산의 연령별 분포 분석

- (예·적금계좌) 올해 예·적금계좌 개인신고자 1,801명 중 50대 579명(32.1%), 60대 487명(27.0%)으로 50~60대 비중이 1,066명(59.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 예·적금계좌 신고금액 43,072억 원으로 연령별 분포는 10대 이하 36억 원(0.1%), 20대 833억 원(1.9%), 30대 1,893억 원(4.4%), 40대 6,957억 원(16.2%), 50대 11,666억 원

(27.1%), 60대 11,449억 원(26.6%), 70대 이상 10,237억 원(23.7%)으로 나타났습니다.

《'22년 개인신고자의 예·적금계좌 연령별 분포》

(명, 억 원)

구분	전체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신고 인원	1,801 100%	7 0.4%	30 1.7%	110 6.1%	340 18.9%	579 32.1%	487 27.0%	248 13.8%
신고 금액	43,072 100%	36 0.1%	833 1.9%	1,893 4.4%	6,957 16.2%	11,666 27.1%	11,449 26.6%	10,237 23.7%
인당금액	24	5	28	17	20	20	24	41

- (주식계좌) 올해 주식계좌 개인신고자 1,621명의 경우 40대 669명(41.3%), 50대 478명(29.5%)으로서 40~50대 비중이 1,147명(70.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 주식계좌 신고금액 158,383억 원으로 연령별 분포는 10대 이하 177억 원(0.1%), 20대 356억 원(0.2%), 30대 4,544억 원(2.9%), 40대 121,145억 원(76.5%), 50대 25,591억 원(16.2%), 60대 5,549억 원(3.5%), 70대 이상 1,020억 원(0.6%)으로 나타났습니다.

《'22년 개인신고자의 주식계좌 연령별 분포》

(명, 억 원)

구분	전체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신고 인원	1,621 100%	6 0.3%	22 1.4%	259 16.0%	669 41.3%	478 29.5%	157 9.7%	30 1.8%
신고 금액	158,383 100%	177 0.1%	356 0.2%	4,544 2.9%	121,145 76.5%	25,591 16.2%	5,549 3.5%	1,020 0.6%
인당금액	98	30	16	18	181	54	35	34

II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적발·제재 실적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법적 제재조치를 엄정 집행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신고대상 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외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을 경우, 미소명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 － 국세청은 '11년 첫 신고 이후 올해 6월말까지 계좌 미신고자 579명에 대해 과태료 2,043억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 《 연도별 과태료 부과현황 》

(명, 억 원)

구 분	합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6.
인 원	579	20	35	43	40	24	47	53	62	40	68	113	34
부과액	2,043	11	15	116	321	44	106	120	213	55	474	446	122

-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징역·벌금형 병과 가능)

- 국세청은 올해 6월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80명을 형사고발하고 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였습니다.

## 《 연도별 고액 미신고자 형사고발·명단공개 현황 》

(명)

구분	합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6.
형사고발	80	-	-	1	7	18	12	11	14	12	5
명단공개	7	-	1	1	2	1	1	1	-	-	-

## III

##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 후 신고에 대한 혜택

- 신고기한 이후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하여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다만, 미(과소)신고 계좌 보유자가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을 받지 못하므로, 자발적으로 수정·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 기한 후·수정 신고 시 과태료 감경률 】

기한 후 신고 시점	수정신고 시점	과태료 감경률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90%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1년 이내	70%
신고기한 후 1년 이내	신고기한 후 2년 이내	50%
신고기한 후 2년 이내	신고기한 후 4년 이내	30%

#### IV 해외금융계좌 제보 안내

- (제보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해외금융계좌 제보 포상금 】

과태료 납부액 또는 벌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 초과금액 ×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MIN(6천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 × 100분의 5, 20억 원)

- (제보 방법) 해외금융계좌 관련 제보는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nts.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 접수를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V 향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관리 방향

- 앞으로도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안내와 제도홍보로 신고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안내하는 한편,
  -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국가간 정보교환, 외국환 거래자료, 유관기관 통보자료를 종합하여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관련제세 추징,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것입니다.
  - 한편 우리나라가 다자간 금융정보 교환협정에 가입('14년)함에 따라 '17년 이후 113개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156개국과는 세무조사에 필요한 조세정보를 수시요청하여 해외계좌 관련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 네트워크가 강화되어, 과거보다 미신고 적발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특히 올해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뿐만 아니라 미신고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한 검증도 실시할 예정이므로,
  -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신고의무자는 해외계좌뿐만 아니라 관련소득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붙임 1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 ● 신고의무자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 시 계좌정보\*를 다음해 6월에 신고
  - \*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 등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관련자 정보 등

### ● 신고대상

- (금융자산 신고)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국외에 소재한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이며, 계좌에 보유한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을 신고
  - \* 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설한 계좌는 '22년 보유분부터 '23년 6월에 신고대상임
- (계좌 관련자 신고) 해당 계좌가 공동명의 또는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본인 외 계좌 관련자\* 정보도 제출
  - \* 계좌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자

### ● 신고방법

- 신고의무자는 다음해 6. 30.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로 전자신고 가능

### ● 미신고자 제재

-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 과태료 부과 및 미(과소)신고금액 50억 원 초과 시 형사고발 및 명단 공개
  - \* '21. 2. 17.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과태료 20억 원 상한 적용
- 미(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요구에 불응 또는 거짓 소명 시 미(거짓)소명금액의 20% 과태료 부과
- 미(과소)신고자에 대한 제재 강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제재 도입과 변경》

구 분	연도별 변경 내용
미신고 과태료	· '11년 3~9%, '12~15년 4~10%, '16년 이후 10~20%
명단공개 도입	· '13년: 50억 원 초과자 명단공개 시행
형사처벌 도입·강화	· '14년: 50억 원 초과자 형사처벌 시행 · '19년: 벌금 하한(13%) 신설(20% 이하에서 13%~20%)
미소명 과태료	· '15년 10%, '16년 20%, '20년 법인까지 소명의무 도입

○ 미(과소)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 (미·과소신고 과태료) 신고기한 내 미(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금액의 10%~20%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국조법\$62①)

미(과소)신고금액	과 태 료
20억 원 이하	해당금액 × 10%
20억 원 ~ 50억 원	2억 원 + 20억 원 초과금액 × 15%
50억 원 초과	6.5억 원 + 50억 원 초과금액 × 20%

\* '21. 2. 17. 이후 과태료 부과분부터 과태료 20억 원 상한 적용

\*\*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단순 미신고 또는 계좌정보의 일부가 확인되는 등의 경우 과태료의 50%를 감경 부과

- (미·거짓소명 과태료)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위반금액의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거짓)소명시 미(거짓)소명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

## 붙임 2 -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 제도 개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지급요건 및 지급액

-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중요한 자료’의 의미
  - 해외금융계좌정보(계좌번호·잔액, 계좌주 성명 등)를 제공\*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또는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 \* 예) 해외금융계좌 사본, 해외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 등
- 포상금 지급액: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20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과태료 또는 벌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 원~2억 원	100분의 15
2억 원~5억 원	3천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6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탈세제보 포상금(40억 원 한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20억 원 한도)의 각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보자에게 최대 80억 원까지 지급 가능

\*\* 과태료 금액(벌금액)이 납부되고 이의제기기간 도과 또는 불복청구 종료 후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경우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2개월 이내 지급

### ● 제보 방법 및 비밀 보장

- 국세청 홈택스\*, 전화,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제보가능
  -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5항)

## 붙임 3 - 외국 과세당국과의 국제공조 상황

### ● 국제공조 현황

- 우리나라는 156개국\*과 국제공조 가능(' 22.8월 기준)
  - \* 조세조약(94) + 조세정보교환협정(12) +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134)

구 분	명 칭	주요 협력 내용	관련국
양자	조세조약	조세정보 교환	94
	조세정보 교환협정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와 조세정보 교환	12
다자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MAC)	회원국 간 정보교환 등 폭넓은 세정협력	134
	한·미 금융정보자동 교환협정(FATCA)	한·미 간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교환	1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	국가 간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교환	112
	국가별 보고서 자동교환협정(CbCR)	국가 간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를 매년 정기적으로 교환	84
	역외정보공조협약의체 (OECD JITSIC)*	역외탈세 글로벌이슈 등에 대한 신속한 국제공조 진행	41

\* JITSIC(Joint International Taskforce on Shared Intelligence & Collaboration)

## 붙임 4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역외탈세 혐의 적발사례

### 사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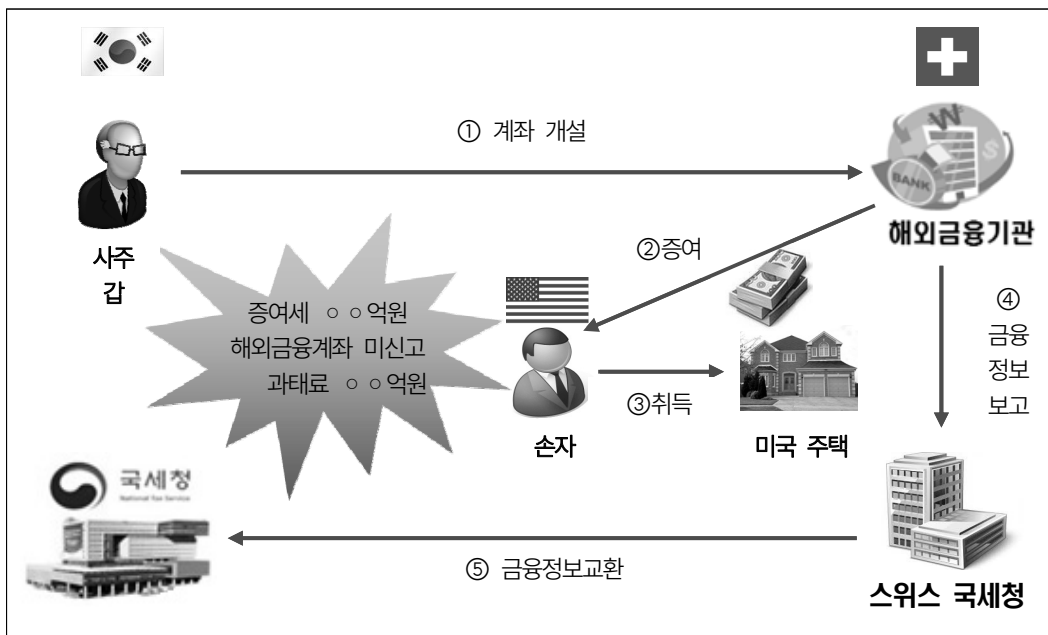
사주일가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증여받은 해외부동산 취득자금 확인 및 증여세 신고 누락 적발

#### ● 인적사항

○ 성 명 : ○ ○ ○

○ 주소지 : ○ ○ ○ 시

#### ● 주요 적발상황



- 사주 갑은 스위스에 계좌를 개설한 후 별다른 소득없이 미국에서 유학생 생활 중인 손자의 미국 계좌로 미국 부동산 취득자금 송금
- 금융정보 교환을 통해 사주일가의 미신고 계좌 및 송금 사실 적발

#### ● 조치사항

- 사주일가에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억 원과 갑의 손자가 증여받은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억 원 추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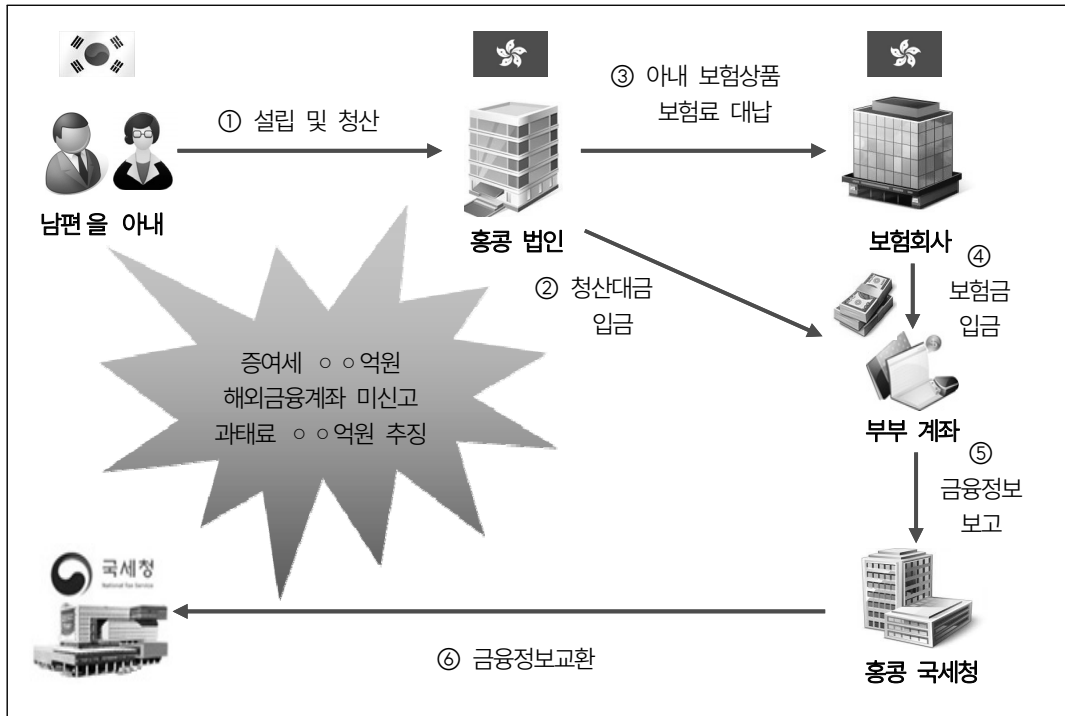
## 사례 2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로 증여받은 해외금융자산 은닉 및 증여세 신고 누락 적발

### ● 인적사항

○ 성 명 : ○ ○ ○

○ 주소지 : ○ ○ 시

### ● 주요 적발상황



- 남편 을은 홍콩 현지법인을 청산하였으나 미화 ○ ○ ○ 만 불 상당의 출자금 등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본인의 미신고계좌에 은닉한 뒤 이를 아내의 보험상품에 보험료로 납입
- 금융정보 교환을 통해 을의 아내가 외화 송금 내역이나 국외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의 아내 명의의 미신고 홍콩계좌에 ○ ○ 억 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

### ● 조치사항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 ○ 억 원과 증여세 ○ ○ 억 원 추징

### 사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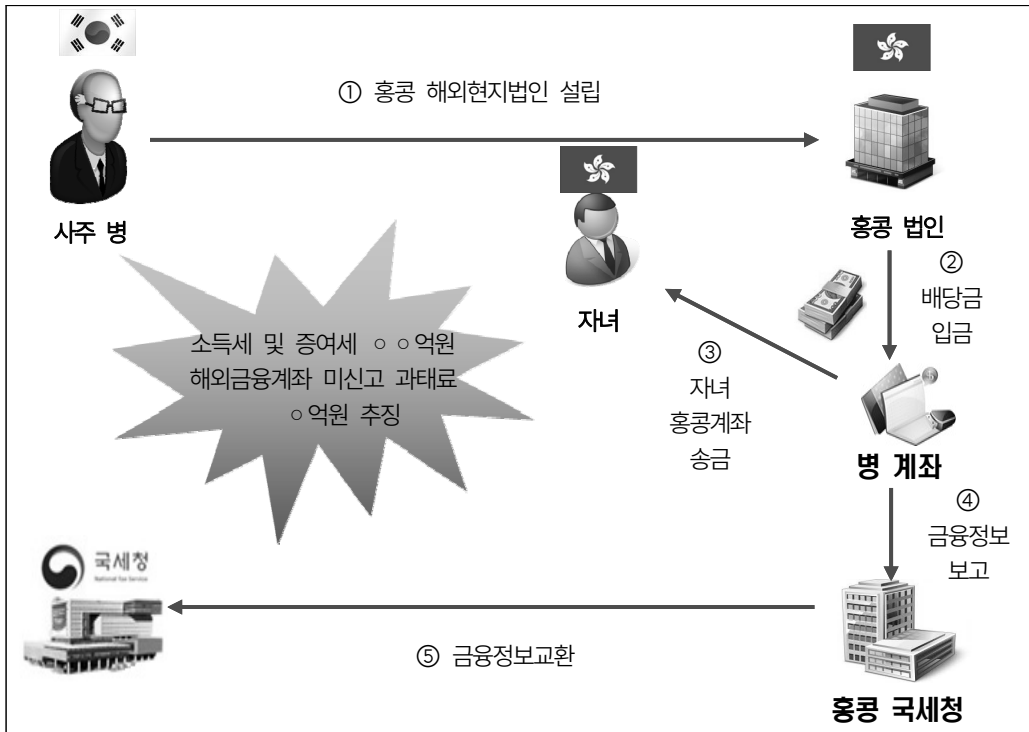
## 미신고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 은닉 및 자녀에 대한 현금 증여 신고 누락 적발

#### ● 인적사항

○ 성 명 : ○ ○ ○

○ 주소지 : ○ ○ ○ 시

#### ● 주요 적발상황



- 사주 병은 홍콩에 신고하지 않은 자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통해 발생한 배당소득을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은닉
- 사주 병 명의의 수십개의 해외금융계좌뿐만 아니라 배우자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자금 흐름을 분석하여 병이 홍콩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이 국외에 거주 중인 자녀의 해외 금융계좌에 이체된 사실 확인

#### ● 조치사항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억 원과 배당소득 신고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억 원 및 자녀에 대한 증여세 ○억 원 추징

# 타인 명의로 재산은닉한 악의적 체납자 추적조사 실시

- 국세청, 2021. 9

- 
-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추적조사대상자 선정에 정확성을 기하고 호화생활자에 대한 수색 등 현장중심의 추적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추진사항)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 59명의 재산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 [호화생활자 재산추적]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전문직 종사자, 부동산 양도 등 법률행위를 가족이 대리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령·연소자(468명)
    - [신종 금융자산 강제징수]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 P2P(온라인투자연계) 금융상품,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자산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한 체납자(59명)
  - (추진성과) 국세청은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1조 2,552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하였습니다.
  -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는 한편,
    -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

## 1 추진배경

-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거주지·은닉재산 및 생활실태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추적조사대상자 선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 타인 명의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적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호화생활자에 대한 수색 등 현장중심의 추적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최근, 사모펀드 등 신종금융자산의 운용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고액 체납자의 새로운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 신종 금융자산에 대한 기획분석을 확대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새로운 재산은닉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 2 중점 추진사항

- 금년 하반기에는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전문직 종사자, 부촌지역 거주자, 부동산 양도 등 법률행위를 가족이 대리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령·연소자에 대해
- 다양한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실거주지 분석과 체납자 및 가족의 소득·지출 내역, 재산·사업이력 등 재산변동 상황, 금융거래(친·인척 포함), 생활실태 정보 등을 정밀 분석하여
- 고가주택, 부촌지역에 실거주하면서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 혐의자 468명을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또한,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의 새로운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정부 징수기관 최초로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체납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자의 출자금을 압류하였으며,
- 세금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상품\*, 가상자산을 활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59명에 대해 강제징수를 추진하는 등 66억 원을 현금징수·채권확보 하였습니다.
- \* '20.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금융제도권 편입
- 이번에 중점 추진한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 계	호화생활자 재산추적	신종 금융자산 강제징수
527명	468명	59명

#### | 주요 호화생활 혐의 체납자 유형 |

- 타인 명의로 소득을 분산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 가족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체납자
- 가족명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면서 소득대비 지출 금액이 과다한 체납자
- 고액의 양도대금을 친인척 계좌 등으로 은닉한 체납자

### 3

## 주요 추진 사례

### 가. 추적조사\* 사례

\* 고의적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기 위한 재산은닉 또는 체납처분 면탈행위 등에 대해 각종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민사소송 제기, 범칙처분 등 엄정 대응하는 일련의 절차

- ☐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가족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자, 부동산 양도 등 법률행위를 가족이 대리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령·연소자 468명

### 나. 강제징수\* 사례

\* 국세납부 불이행시 자력집행력에 의거 국세채권의 확보를 실현하기 위해 압류·매각·추심 및 청산 등에 따라 진행하는 일련의 절차

- ☐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 출자금, P2P(온라인투자연계) 금융 원리금수취권,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체납자 59명

### 다. 수색 사례

- ☐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수색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4 추진성과

- 국세청은 금년 지방청·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을 재정비하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추적조사를 강화하였으며,
  - 이들에 대한 탐문 및 잠복 활동과 재산추적조사를 집중 실시하여 올해 6월까지 1조 2,552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확보 하였습니다.
- 아울러 금년 상반기까지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378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47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한층 강화 하였습니다.

## 5 향후 추진 방향

-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합니다.
  -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인터넷, 모바일) 등에 공개되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하여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은닉재산 신고 : 국세청 누리집 >> 국민소통 >> 국세청 100배 활용 >> 은닉재산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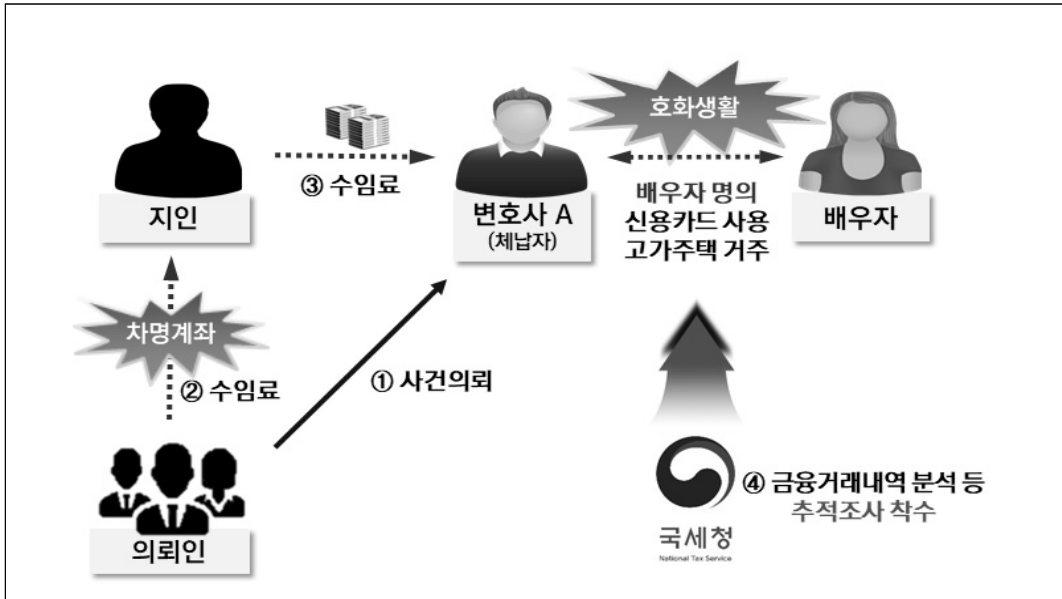
\* 명단공개 확인 : 국세청 누리집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은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다만, 최근 집중수해와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등의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 붙임 1 주요 추진사례

### 추적 사례 1 수입료를 지인명의 계좌로 수취·은닉하고 호화생활 중인 변호사



####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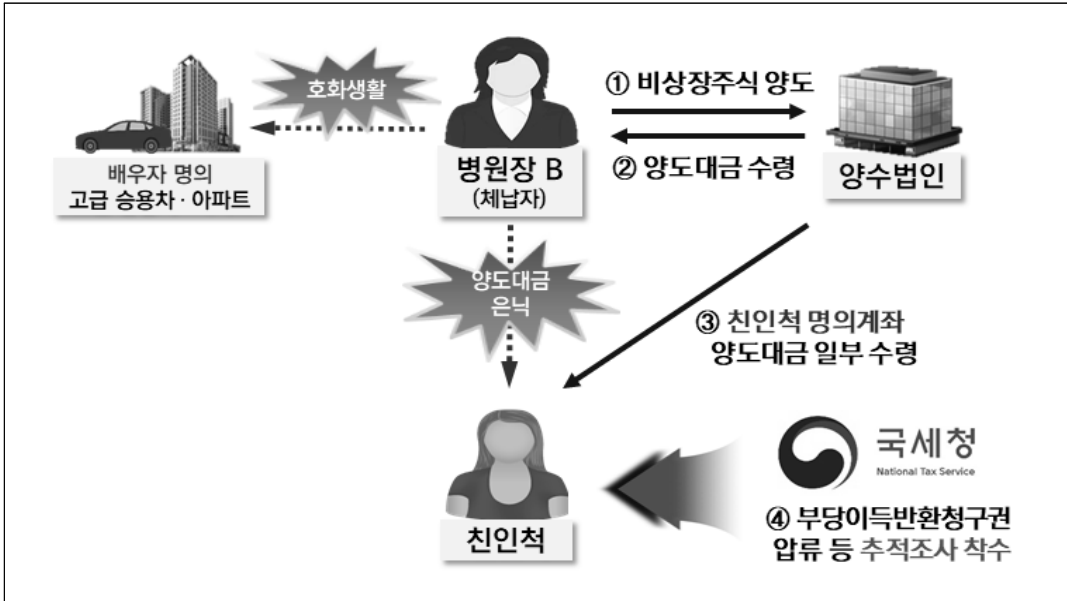
- 부가가치세 등 경정 고지, ○억 원 체납
- 변호사 A는 최근 3년간 ○○억 원의 고액 수입료를 지인 명의계좌로 수취하여 수입금액을 은닉하였고,
  - 본인 명의 재산은 없이 배우자 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호화생활하는 것으로 확인

#### □ 체납추적조사 방향

- 차명계좌 및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은닉된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추적조사 착수
- 재산은닉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및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검토

추적 사례 2

주식 양도대금을 친인척 명의로 수령·은닉하고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서 호화생활 중인 병원장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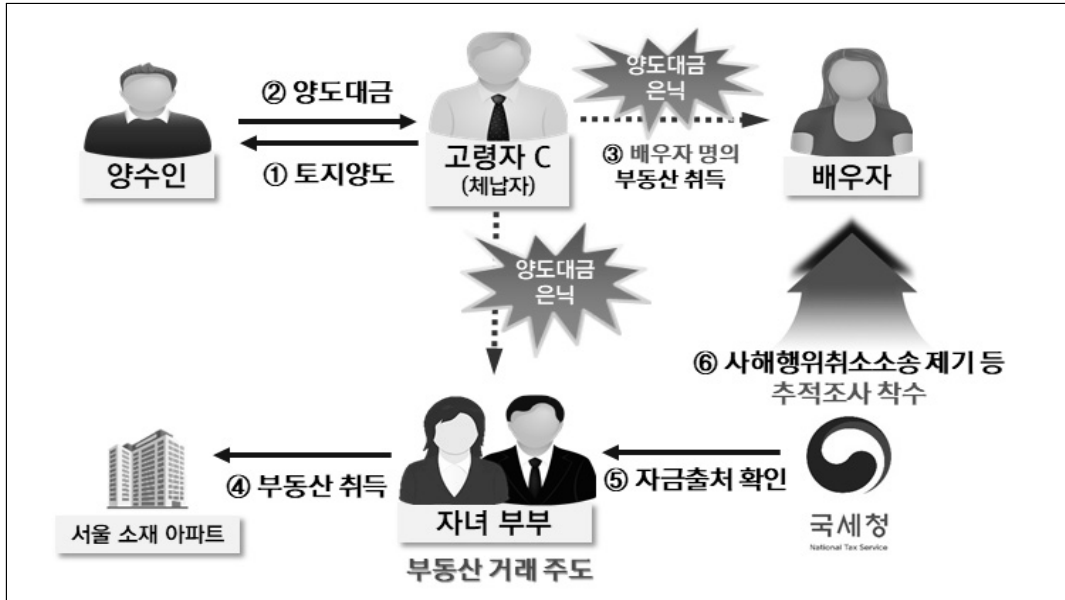
- 종합소득세 등 경정 고지, 〇〇억 원 체납
- 병원장 B는 수입금액 탈루에 따른 세무조사 전 비상장주식을 양도 후 양도대금 중 일부를 친인척 명의 계좌로 은닉하고, 세무조사에 따른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후 병원을 폐업하여 강제징수 회피
- 은닉된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 고급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하는 것으로 확인

□ 체납추적조사 방향

- 친인척 명의 계좌로 수령한 양도대금에 대해 체납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을 압류하고,
-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한 양도대금 사용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적조사 착수



## 추적 사례 3 부동산 양도대금을 자녀가 고의적으로 은닉한 고령의 체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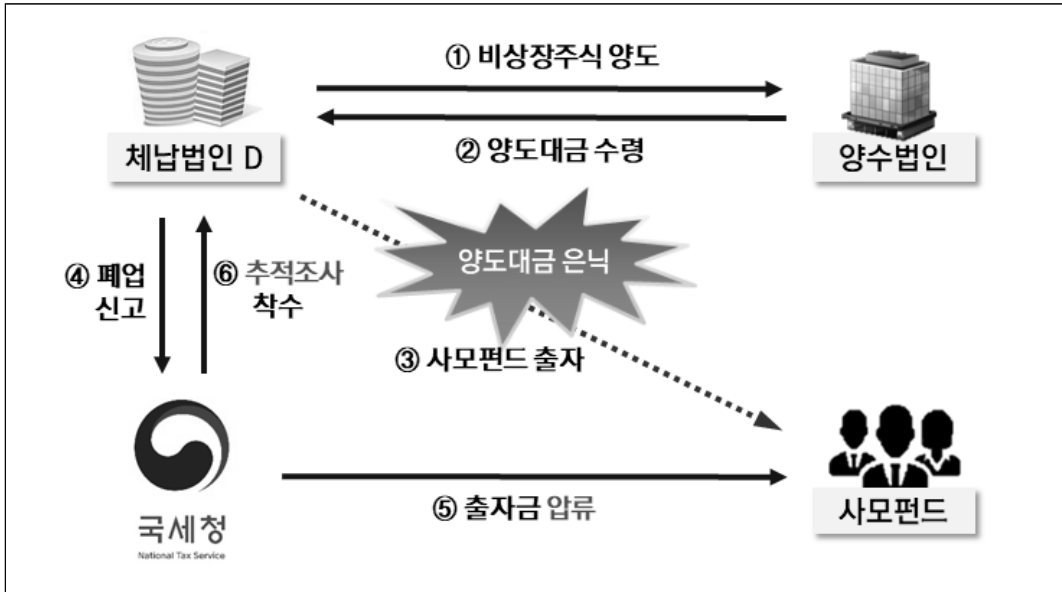
##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양도소득세 무신고 고지, ○억 원 체납
- 체납자 C는 ○○광역시 근교 토지를 ○○억 원에 양도하고 근저당채무를 제외한 ○억 원을 현금 및 수표로 인출 하였으며,
  - C의 자녀가 거래를 주도하여 양도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 및 며느리 명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한 사실을 확인

## □ 체납추적조사 방향

- C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배우자에게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 며느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내역 등 자금출처 확인을 위해 추적조사 착수

징수 사례 1 주식 양도대금을 사모펀드에 은닉한 체납법인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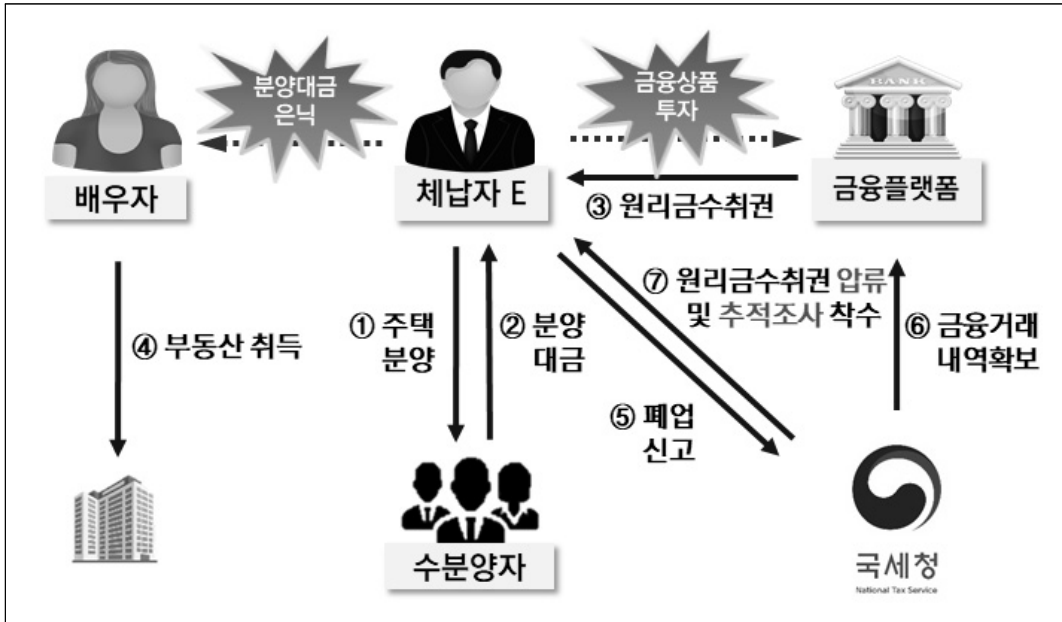
- 법인세 등 신고 후 무납부, 〇〇억 원 체납
- 소프트웨어 공급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 D는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〇〇〇억 원에 양도
  - 양도대금 중 일부를 출자자가 공개되지 않는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에 출자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법인은 폐업하여 강제징수 회피

□ 체납추적조사 방향

- 신종금융자산에 대한 기획분석 시 D가 사모펀드에 양도대금을 은닉한 것으로 확인하여 출자금에 대해 압류하고,
- D의 대표이사 등을 대상으로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 회피 및 법인자금 유출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에 대해 추적조사 착수



## 징수 사례 2 주택신축 판매대금을 P2P금융상품에 은닉한 체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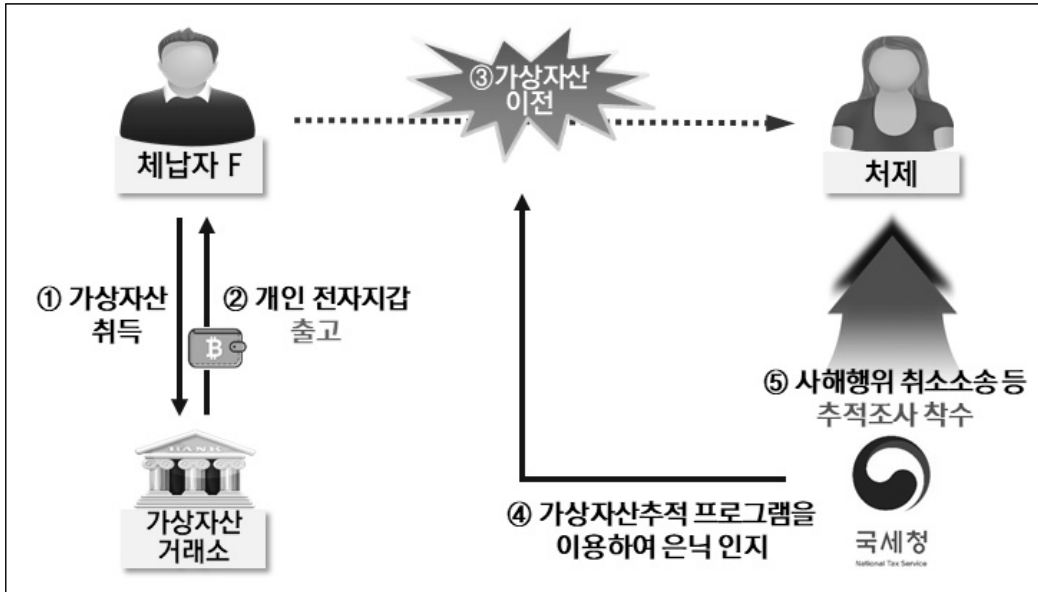
###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종합소득세 등 신고 후 무납부, 〇억 원 체납
- 주택신축판매업자 E는 수도권 소재 다세대주택 〇〇채를 분양하고 받은 주택신축판매대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 판매대금 중 일부를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폐업 등 강제징수 회피

### □ 체납추적조사 방향

- E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E가 P2P금융 플랫폼으로부터 취득한 원리금수취권을 압류하고,
  - 분양 직후 특별한 소득이 없는 체납자의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판매대금을 은닉한 혐의에 대해 추적조사 착수

징수 사례 3 가상자산을 처제에게 이전하여 은닉한 체납자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양도소득세 무신고, 〇억 원 체납
- 체납자 F는 비수도권 소재 부동산을 〇〇억 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
  - 가상자산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한 결과,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개인 전자지갑으로 이전 후 최종적으로 처제 명의의 가상자산 주소로 이전한 사실을 확인

□ 체납추적조사 방향

- 체납자 F가 처제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하여 재산을 은닉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등을 위한 추적조사 착수





## 붙임 2

## 수색 사례

## 수색 사례 1 직원 명의 오피스텔 개인 금고에 은닉한 현금 14억 원 징수

- ☐ 강제징수 회피 실태
- 종합소득세 경정 고지 등, ○○억 원 체납
  - 체납자는 컴퓨터 판매업자로 세무조사를 받던 중 배우자 명의로 새롭게 법인을 설립한 뒤 위장이혼하고, 운영하던 법인은 폐업하는 등 치밀하게 재산을 은닉
- ☐ 추적조사 결과
- 은닉재산 확인을 위해 배우자 명의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는 체납자를 1개월간 10회 이상 잠복 및 추적
  - 직원 명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배우자 명의 외제차 등을 운행하는 등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확인하고, 배우자 사업장 및 거주지에 대해 동시 수색 착수
  - 거주지 개인 금고에서 현금다발을 확인하여 총 14억 원 현금징수(지방세 1억 원 포함)

## 수색 사례 2

## 사실혼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며 약상자에 숨긴 현금 1억 원 징수

- ☐ 강제징수 회피 실태
- 양도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 ○○억 원 체납
  - 부동산 양도 후 강제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양도대금 ○○억 원 중 ○억 원을 수십차례에 걸쳐 현금·수표 인출하여 재산을 은닉
- ☐ 추적조사 결과
- 체납자는 장기간 약국을 운영 중인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로서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양도대금을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어
  - 탐문·잠복 결과, 사실혼 배우자 명의 아파트(38평형)에 거주하면서 고급 차량을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하는 것을 확인하고 거주지 수색 착수
  - 경찰 입회하에 수색 진행하여 약상자 등에 숨긴 1억 원 현금 징수

<b>수색 사례 3</b>	<b>개인 금고로 개조한 차량 트렁크 등에 은닉한 현금·외화·골드바 등 13억 원 압류</b>
----------------	--

- ☐ 강제징수 회피 실태
  - 종합소득세 등 경정 결정, ○○○억 원 체납
  - 금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과세 되자 부동산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사업장을 폐업하여 강제징수 회피
- ☐ 추적조사 결과
  - 체납자가 폐업한 사업장에 제3자가 동일업종을 운영하여 명의위장 혐의 검토를 위해 소비자로 가장하여 탐문하였으나, 정상 사업자로 확인되어 잔존재화 등이 거주지에 은닉되었을 것으로 추정
  - 탐문·잠복 결과, 체납자는 수도권 소재 부촌의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가족이 외제차를 2대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거주지 수색 착수
  - 거주지 안방 베란다 및 금고와 차량 트렁크 내 개조하여 만든 금고에서 현금·외화, 골드·실버바 및 각종 귀금속 등 약 13억 원 압류

<b>수색 사례 4</b>	<b>골프장 내 별도 금고에 은닉한 현금 등 6억 원 징수</b>
----------------	--------------------------------------

- ☐ 강제징수 회피 실태
  - 개별소비세 등 신고후 무납부, ○○억 원 체납
  - 골프장 호황에 따라 이용자가 급증하자 연간 이용권 대금을 사업용 계좌가 아닌 별도 계좌로 수령하고, 골프장 사용료 등 매출금액을 현금 유도하여 강제징수 회피
- ☐ 추적조사 결과
  - 은닉재산 확인을 위해 수색 착수 전 골프장 이용자로 가장하고 탐문하여 사용료를 현금 유도하는 등 재산은닉 행위를 확인
  - 수색 착수 당일, 연간회원권 대금을 수령하는 계좌 압류를 위해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별도 계좌를 압류하고
    - 골프장 내 관리실, 창고 등을 중점 수색한 결과, 창고 내 별도 금고 안에 숨겨둔 현금 5천만 원 및 압류한 계좌 추심을 통해 총 6억 원 현금징수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점검 결과 및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 2021. 9

## I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 (정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지칭\*(외부감사법 제8조 제1항)
  - \*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 (목적) 회사는 구비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법규준수 여부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도록 하여,
  - 회사가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 (적용대상)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사항(외부감사법 제8조) 〉

구 분	내 용
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마련하고, 상근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
대표자 (내부회계관리자)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
감사 (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를 이사회에 매 사업연도마다 대면 보고하고,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
감사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감사(상장법인)·검토(비상장법인)하고 그 결과를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으로 표명

- (법규위반시 제재) 증권선물위원회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회사, 대표자, 감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외부감사법 제47조 제2항)

## II 점검 결과 분석

※ 2019, 2020 회계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을 점검

### (전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 현황 : 총 97건 위반

- 2019, 2020 회계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 \*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법인(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회사, 회사대표자, 감사(위원회),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을 점검
  - 총 97건(회사 58건, 대표자·감사 28건, 감사인 11건)의 위반사례가 발견
  - 이 중 48건(회사 19건, 대표자·감사 18건, 감사인 11건)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22.7.19.의결)가 300~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 외부감사법시행령 별표2 및 외부감사규정 별표9 「과태료부과기준」(‘붙임1’ 참조)
  - 2019, 2020 회계연도의 총 위반건수는 각각 41건, 56건으로 이전 4년(2015~2018 회계연도)의 위반 평균(약 40.5건) 대비 다소 증가
  - 이는 新외부감사법 시행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검증절차가 강화된 것과 COVID-19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위반회사 점검 결과〉

(단위 : 사)

회계연도	내부회계 미구축		내부회계 미보고		검토의견 미표명		위반 합계	
	회사	과태료 면제*	대표자 등	과태료 면제*	감사인	과태료 면제*		과태료 면제*
2015	34	28	5	3	6	1	45	32
2016	35	28	2	1	10	3	47	32
2017	36	33	2	-	4	4	42	37
2018	19	14	2	1	7	-	28	15
2019	22	13	15	4	4	-	41	17
2020	36	26	13	6	7	-	56	32
계	182	142	39	15	38	8	259	165

\* 회생절차, 폐업, 임직원수 5인 이하 등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 위반

- (회사유형별) 위반회사(58사) 중 주권상장법인은 7사(유가증권 1사, 코스닥 6사)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비상장법인(51사)



- 주권상장법인은 7개사를 제외하고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 비상장법인은 관리직 인력 부족, 법규숙지 미흡, 열악한 재무 상태로 인한 감사의견거절 등으로 의무 위반이 다수 발생
- (감사의견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구축한 회사의 당해연도 감사의견 거절은 38사로 대부분(66%)을 차지
  -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내부통제이므로 내부회계관리가 부실할 경우 감사의견 형성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
- (과태료 부과) 위반회사 58사 중 19사에 대하여 각 300~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면제사유\*) 임직원 5인 이하의 영세기업이거나 기업회생,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과태료 면제
    - \* 외부감사법시행령 별표2 및 외부감사규정 별표9 「과태료부과기준」(‘붙임1’ 참조)

#### 주요 위반원인 분석

- (중요한 의사결정자 부재로 미구축) 경영권분쟁 등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정상적으로 구축 및 운영할 수 없는 경영권 공백 상태 기업이 다수를 차지
- (회생절차 신청으로 미구축) 기업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운영·관리가 어렵다고 보아 과태료를 면제 하나, 회생절차 개시 이전 회계연도와 워크아웃 진행회사는 구축의무 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착오하여 위반

#### (대표자·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의무 위반

- (보고/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의무 위반은 28건으로 단순 착오 등의 법규숙지 미흡, 회생절차 진행 등이 주요 원인
  - 특히, 대표자 및 감사는 운영실태와 운영실태평가결과를 문서화는 하였으나,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과태료 부과) 위반회사 28사 중 18사(26인)에 대하여 각 300~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주요 위반원인 분석

- (보고누락)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운영실태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대표자 및 감사는 해당내용을 이사회 등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 (회생절차 진행중으로 미보고)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중인 상황으로 관리인 선임, 대규모 임직원 퇴사 등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구축이 되어있더라도 정상적으로 내부회계관련 보고를 진행하지 못함(과태료면제)

#### (감사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검토의견 미표명

- (회계법인 유형별) 위반 감사인 11사 중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등록회계법인은 2사이고, 나머지 9사는 비상장사만 감사 가능한 일반회계법인
  - ※ 상기 11사 중 8사는 회사 측의 의무 위반도 함께 지적
- (감사의견별) 감사인 11사의 위반과 관련된 피감사회사 12사에 대한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 7건, 의견거절이 5건
  - 위반의 대부분은 감사인이 단순 착오 혹은 감사의견거절 표명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 표명이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함에 따라 발생
- (과태료 부과) 위반 감사인 11사에 대하여 각 300~1,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회사의 과태료 면제사유(회생절차 개시, 임직원 5인 이하)가 감사인에게 적용되지 않아 의무 위반시 대부분 과태료가 부과됨

#### 주요 위반원인 분석

- (내부회계검토의견 미표명) 2019, 2020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거절을 표명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하여 검토의견 미표명
- (최종 제출여부 미확인) 내부회계 관련 검토를 수행하고 의견까지 작성하였으나, 착오 등으로 검토의견 공시를 단순 누락
- (회사의 미구축)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검토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검토의견이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하여 검토의견 미표명



## 유의사항

## 1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를 통해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

- 최근 대규모 횡령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설계·운영하여 횡령 등 부정행위를 예방·적발하고, 재무제표 신뢰성 및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 (감사인) 충분한 인력 및 자원을 투입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검토)절차를 충실히 수행할 필요
  - (감독당국)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점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강화된 공시서식 개발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를 추진 중

## 2 新외부감사법상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숙지 필요

- 회사의 대표자와 감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의무가 新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라 강화되었음
- (대표자)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상근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주총·이사회·감사에게 내부회계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보고\*하여야 함
    - \* 新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주총보고가 추가되었으며, 이사회 및 감사에는 대면보고 필요
  - (감사) 대표자로부터 보고받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기총회 1주전 이사회에 대면보고 하여야 함

## 〈 新외부감사법상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 분	舊 외부감사법	新 외부감사법('18.11.1. 시행)
조항	제2조의2~3	제8조
보고주체	상근임원 (내부회계관리자)	대표자 (내부회계관리자)
보고대상	이사회, 감사(위원회)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감사의 책임	운영실태평가, 이사회 보고 등의 의무가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 규정 없음	운영실태평가결과를 문서화하고 주주총회 1주전 이사회에 대면보고
인증	검토	감사*

\*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시행  
 '19년(2조원 이상) → '20년(5천억원~2조원) → '22년(1천억원~5천억원) → '23년(전체)

### 3 감사인의 검토(감사) 의견 표명의무

- ☐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인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감사)의견을 표명해야 함
  -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았더라도 감사인이 검토의견 표명이 가능하기에 과태료가 면제되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

### 4 최종 공시여부 확인 필요

-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필수공시서류\*의 공시누락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필요(내부회계관리제도 필수 공시서류 양식 및 사례 붙임2 참조)
  - \*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①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②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③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을 첨부  
(감사인) : 감사보고서에 ①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②감사인의 검토 의견 또는 감사의견을 첨부

## 붙임 1 과태료 부과기준(외부감사규정 별표9 참조)

#### ① 과태료 부과 방법

- 법정최고금액에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표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예정금액을 산정하고, 가중·감경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

< 과태료 부과 산식 >

$$\boxed{\text{법정최고금액}} \times \text{예정비율} = \boxed{\text{예정금액}} \pm \text{가중·감경 및 조정} = \boxed{\text{과태료 부과액}}$$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표 >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대	기준금액의 100%	기준금액의 80%	기준금액의 60%
보통	기준금액의 80%	기준금액의 60%	기준금액의 40%
경미	기준금액의 60%	기준금액의 40%	기준금액의 20%

※ 위반동기 판단기준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르는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르는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위반결과 판단기준

- (1) 중대 : 해당 위법행위가 언론에 공표되거나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되어 있어 회계정보의 투명성 및 신뢰성이 크게 훼손된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미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등을 의미

## ② 과태료 면제 사유

- (회생절차진행 등) 위반당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등 정상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과태료 면제 [과태료부과기준 6.나]
- (임직원수 5명 이하) 위반당시 인력구조를 고려할 때 정상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관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과태료 면제 [과태료부과기준 6.나]
- (기타) 조치시 폐업, 청산, 파산 등 사실상 납부 능력이 없어 과태료 면제 [과태료부과기준 4.가]

###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9월 23일 [금]	9월 26일 [월]	9월 27일 [화]	9월 28일 [수]
미 달 러 (USD)	1408.00	1408.40	1429.70	1427.20
일 본 엔 (JPY)	989.15	981.53	988.80	985.43
영 국 파 운 드 (GBP)	1585.27	1527.13	1530.06	1529.82
캐 나 다 달 러 (CAD)	1044.39	1037.00	1041.03	1039.93
홍 콩 달 러 (HKD)	179.38	179.42	182.14	181.81
위 안 화 (CNH)	198.45	198.40	199.66	199.31
유 로 화 (EUR)	1385.33	1365.51	1374.08	1368.47
호 주 달 러 (AUD)	935.33	919.69	923.51	917.69
싱 가 폴 달 러 (SGD)	992.77	984.93	994.23	991.63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08.30	307.61	310.60	309.54